

대선 이후 러시아 경제의 진로

조홍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초에 막을 내린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 대통령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공산주의로의 복귀 심리로 상당히 고전하였다. 향후 러시아 경제는 재정 적자의 감축, 물가 안정, 경제 질서의 확립 등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있으나, 옐친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00년경부터는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변혁기의 대통령직을 맡았으나 재임중 국민의 대부분은 더욱 가난해졌다. 동구의 체제전환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그러한 지도자에게 재기회를 준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흥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그의 재선은 쥬가노프라는 대안이 러시아 유권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러한 대안을 회피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된 개혁을 선택하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구소련 해체 후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지친 일부 국민들이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옐친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공산주의의 득세를 우려한 국민 대다수의 심리에 힘입은 것이다.

옐친의 재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6월 15일의 1차 투표에서 승자를 가리지 못해 7월 4일 결선 투표로 이어진 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총선에서의 승리 여세를 몰아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공산주의자인 쥬가노프 후보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3위 후보인 레베드와의 제후에 성공한 옐친은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 53.7%의 지지로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급한 성격과 불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옐친의 재선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舊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러시아 경제의 현주소¹⁾

금년 상반기 러시아 경제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성장, 물가, 대외 경제 면에서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인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물가 상승률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

〈표 1〉 러시아 대선 득표율

	옐친	쥬가노프	레베드	(%)
1차	35.2	32.0	14.7	
2차	53.7	40.4	-	

나 다소 개선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만약 대통령 선거가 없었다면 긴축 기조를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작년보다 훨씬 안정된 경제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하여 금년도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과 100%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실질 성장률은 -4%이며 무역수지는 약 2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1%에 이르고 있다. 산업 생산은 내수 부진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수출 산업 부문과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설비 투자를 비롯한 투자 부문의 부진이다. 어두운 경제 성장 전망과 높은 물가 상승, 150%가 넘는 명목 금리 등의 이유로 러시아의 설비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한 투자 부진²⁾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취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러시아 정부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금년 중에 계획된 정부 투자의 20% 정도만이 실제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또한 국내 저축률 통계는 2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으로 인하여 연간 50~70억 달러의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금으로 보관하는 국내 자본 도피 액수도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투자뿐 아니라 소비도 감소하여 소매 판매액이 7% 감소하였다. 아울러 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와 같은 자유화 과정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년도 러시아 경제 정책의 기조는 재정 적자 축소와 물가 안정을 통한 거시 경제의 안정 기조 정착이 우선이었다. 예산을 보더라도 세입 증대와 보조금 삭감 등 재정 적자 축소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예산범에서는 재정 적자의 규모를 예상 GDP의 3.85% 내로 제한하고 있고, 중앙은행 총재의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안정 기조의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가지고 있다. 거시 경제의 안정 기반 위에서 생산 부문의 투자 확대를 기한다는 정책 기조에 힘입어, 금년 1/4분기 러시아의 경제 성적표는 작년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은 연 50% 수준을 목표로 하는 식의 계획이 비교적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5일 선거와 7월 4일의 결선 투표때문에 2/4분기의 경제 실적은 작년 수준 또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 러시아의 거시 경제 지표 및 정책 기조는 산업연구원, 「경제전망」, 1996년 6월호, pp. 82~88을 참조하였음.

2) 재정난과 투자 부진에 관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實物經濟」, 1996. 7.3. p. 27.을 인용하였음.

재정 적자 문제와 서방 국가들의 태도

러시아가 직면한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향후 경제 운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이다.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근본적으로 稅收 부족과 과도한 정부 지출에서 기인한다. 지나치게 발달한 지하 경제와 조세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탈세가 횡행하고 세원 포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 일부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큰 것을 불평하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러시아 GDP의 약 11.5%가 세금으로 징수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평균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국민 경제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감내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나 일반 국민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상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옐친이 제시한 일련의 선심성 공약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옐친은 체불 임금의 지급, 국민 연금의 확대, 인플레이션으로 잠식당한 저축 보상 등 재정 지출 부담이 엄청날 뿐 아

니라, 시장 경제 원칙을 상당 부분 희생하는 그야말로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였다. 러시아 경제가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가장 극명하게 요약된 것이 바로 재정 적자 문제일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재정 적자 문제에 관해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IMF가 오히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거전부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³⁾ 물론 IMF가 러시아 정부 자체나 또는 옐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IMF는 옐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일 것이다. 물론 IMF는 공식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국가, 특히 미국과 독일의 분담금이 운영 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MF가 공여하는 차관은 대개 상당히 엄격한 거시 경제 목표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는 최소한 선거 전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옐친의 정치적 입지를 해치지 않으려는

〈표 2〉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對GDP 비중)

	5.7	7.9	4.6
	4.8	7.5	7.0

주: '실적 1'은 IMF의 계산 방법에 의한 추정치, '실적 2'는 이자지급분을 고려하지 않은 러시아 재무 당국의 계산에 의한 추정치.

배려라고 해석된다. 지난 2월 IMF가 제공한 3년짜리 100억 달러의 차관은 폐소貨 위기 당시 멕시코에 공여된 것 다음으로 대규모 차관이다. 이는 분명 IMF,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 공여 직후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는 법정 한도를 넘어섰고 러시아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구조 개혁은 당분간 물건너간 듯했다. 그러나 옐친이 지난 달 100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10억 달러를 긴급 방출할 때도 IMF는 묵과하는 자세였다.

또한 관측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IMF측과의 재정 지출 축소를 약속한 직후인 지난 3월에 이미 재정 적자는 법정 상한선을 돌파하였고, 4월에는 高利率의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을 재정 지출에서 제외하는 러시아 재무부식의 계산법에 의해서도 이미 그 한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지난 4월 각각 4억 달러와 27억 달러의 원조 차관을 공여했다. 결국 IMF와 서방 국가들은 그들의 차관 공여가 러시아 정부의 다소 무모할지도 모르는 재정 지출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옐친이 승리하는 것을 도와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가장 심각한 것이 불가 상승이다. 아울러 루블화 환율의 불안정도 문제가 된다. 과도한 재정 지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일부에서는 1994년 10월 루블화가 하루에 22% 하락했던 '검은 화요일'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외화 차관과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으로 루블화 가치를 유지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 자금의 차입으로 오히려 금리 하락 효과와 이자 지급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 과제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몇가지 정책 과제를 생각해보면, 우선 稅收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체계를 단순화·투명화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인다. 재정 적자가 누증될 경우, 언제까지나 서방의 원조성 자금 차입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물가 상승, 고금리, 환율의 불안정성과 같은 거시 경제의 불안 요소가 한꺼번에 불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독점인 철도, 전력 및 기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시급하다. 이들 사업 부문은 현재 적자 누

3)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에 관한 IMF의 자세에 관해서는 *Economist*, "Mr. Yeltsin's Flexible Friend," 1996. 7.13. pp. 69~70을 참조하였음.

증과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득 격차 문제는 옐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이다. 급격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그로 인한 경제 질서의 파괴, 지하 경제의 성장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다같이 빈곤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현재 계층간, 지역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은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공산당 후보 쥬가노프의 지지자들이었다.

러시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옐친 지지자의 35%가 경제 성장 문제, 22%가 사회보장 문제라고 답변 반면, 쥬가노프의 지지자들은 46%가 사회보장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⁴⁾ 이들 가운데 경제 성장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 사람은 고작 16%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 사회가 경제 정책의 철학에 관하여 대체로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적 혼란의 단계'를 넘어서 '경제적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이른바 마피아가 암약하는

지하 경제의 규모가 너무 크고, 일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 경제 곳곳에 침투하는 식은 곤란하다. 지하 경제가 기승을 부릴수록 체감 물가가 상승하고, 세원으로 파악되지 않아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하 경제는 소득 격차의 원인이며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다.

제약 요인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개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인들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경제 논리보다는 아직도 정치적 제약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 옐친의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 만약 옐친에게 有故가 생겨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러시아 헌법은 일단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총리(현재 체르노미르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옐친을 괴롭힌 쥬가노프이다. 공산당원인 쥬가노프는 경제적 실패에 지친 상당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바로는 쥬가노프는 일부 기업의 재국유화, 보호 무역주의, 對서방 의존의 축소, 국가의 경제 개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은 비록 공산주의자이지만 급격한 정책

4) TIME, 1996. 5.27.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유가노프가 등장하면 이후 전개될 경제 정책의 변화 또는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서방 국가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경우 러시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경제 원조의 중단 또는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혹 대통령 선거 1차전에서 3위를 하여 유가노프를 물리치기 위해 결선 투표에서는 옐친 진영에 합류한 레베드에게 기대를 걸 수도 있으나, 그의 경제 문제에 대한 식견과 철학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

지금까지의 관찰로 보아 과연 그가 시장경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서방측 언론의 공통된 의견인 듯하다. 따라서 옐친의 유고시에 크렘린은 분명 곤혹감 속에서 표류할 것이다.

옐친의 두번째 당면 과제는 체첸 문제이다. 일단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대다수 체첸공화국민들이 분리 독립을 원한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체첸 지역에서의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적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정치적인 제약 요인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下院인 Duma), 옐친과의 정치적 연계의 대가로 레베드측 인사의 영입 문제, 내각에 유가노프 계열의 공산당원 포함 움직임, 정책 보좌관으

로 임명된 레베드와 총리인 체르노미르단간의 반목 등이 있다. 모두 향후 경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다.

끝으로 위에서 말한 재정 적자 문제이다. 선거 기간 동안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결과 약 100억 달러의 추가 재정 지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 이미 이를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단행하였고, 옐친의 재선을 돕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IMF는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1996~98년간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외 자본의 유입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와 같은 공적 국제기구에 의한 원조 외에 국제 금융 시장의 일반 상업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전망을 밝게 보지 않고, 따라서 러시아 투자에 관해서는 관망세를 취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1~2년 간 해외 상업 자본의 러시아 투자는 SOC 건설과 같은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현상은 재정 적자를 많은 부분 해외 원조로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큰 제약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향후 러시아 경제의 진로

위에서 강조한 것처럼 러시아 경제의 향후 방향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의 '양분화 현상'은 옐친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의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이 필요한데 긴축 정책을 강행할 경우, 세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나 공공 요금 인상, 주택 보조금 삭감 등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러시아 경제가 일단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실질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려면, 전적으로 옐친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제대로 정착되었는지가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옐친으로서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나타난 공산주의에의 향수와 국수

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지속하는 길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 유권자의 77%가 '민주주의'와 '법 질서의 유지' 중에서 선택할 경우 '법 질서의 유지'를 중요시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⁵⁾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와 관련한 법 질서의 유지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건대, 40대 이하의 젊은 계층과 화이트 칼라 계층이 옐친을 지지하고 있어 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개혁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러시아 경제가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수행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시 경제 예측이 가능하고 2000년경부터는 시장경제체제가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3> 향후 러시아 경제 전망(WEFA)⁶⁾

	1.0	4.0	5.0
	70.0	50.0	8.0
	10	9	-5
	130	130	135

5) TIME, 1996, 5.27.

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vol 2, May 1996을 참조하였음.